

이번 주말 촛불 또 뜨겁게 타오른다

탄핵표결 결과와 무관하게 5차 전북도민총궐기 촛불집회 진행

전북도민의 박근혜 퇴진을 부르짖는 2만 개의 촛불이 이번 주말 또다시 뜨겁게 타오른다.

탄핵 표결의 결전의 날이 밝은 가운데 전북비상시국회는 탄핵 표결 결과와 무관하게 10일 전주 충경로 사거리에서 2만개의 촛불을 목표로 집회를 강행한다고 밝혔다.

전북비상시국회 관계자는 "탄핵이 국회에서 통과돼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물러난 것이 아니고, 헌법재판관들에게 민심의 엄중함을 알릴 필요성이 있다"며 촛불 집회 강행이유를 설명했다.

전북의 여러 시민단체들은 도민들과 함께 지난 한 주 동안 탄핵 소추인의 통과에 시선을 집중한 가운데 통가를 위해 노력을 지속해 왔다.

전북비상시국회는 도민들과 함께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정운천 의원(전주갑·새누리당) 사무실 앞에서 정 의원의 탄핵 찬성을 강요하는 비상 촛불집회를 진행해 왔다.

정운천 의원 사무실의 관계자는 "전북도민들의 엄중한 뜻을 충분히 알아들었다"며 "정운천 의원님은 사전에 이미 탄핵 찬성의 뜻을 밝혔고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

다. 표결에서 역시 반드시 찬성에 투표하 시기로 했다"고 전했다.

전북 전북도연맹의 농민들 역시 지난 8일 트랙터를 이용해 평택광장으로 이동했으며, 금일 출정식과 함께 트랙터를 국회로 이동시켜 탄핵 찬성을 압박할 예정이다. 이어 대규모 촛불집회가 예정돼 있는 10일에는 서울 광화문 광장으로 합류해 힘을 보탤 예정이다.

조합원 1만2000여명과 함께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해 총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민주노총 전북본부 역시 탄핵이 부결될시 전 조합원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관계자는 "현재 3만 6000여명의 조합원 중 절반에 못 미치는 1만2000명의 조합원들이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반약에 탄핵이 부결된다면 전 조합원이 파업에 나서 탄핵 부결에 책임이 있는 집단에게 책임을 물겠다"며 결연한 뜻을 전했다.

한편, 10일 열리는 제5차 전북도민총궐기 촛불집회에는 김승수 전주시장, 안호영 의원(완주, 진안, 무주, 장수·더민주) 등이 참석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근 기자

탄핵안 부결 시

여의도 핵폭풍 불 보듯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여의도 국회 전체의 운명을 가를 탄핵소추안 표결이 9일 실시된다. 탄핵안 찬성이 정족수인 200명을 넘어 가결된다면 정치권은 예정대로 대통령 직무정지 및 황교안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아래 내년 대선을 향한 준비에 들어가겠지만 부결될 경우의 후폭풍은 섬불리 예단기 어렵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 전체가 비판 여론에 직면하는 것은 물론이고 민심의 분노가 극에 달할 게 분명해 상상을 초월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광화문 촛불민심도 더욱 뜨겁게 타올라 청와대 경호 문제도 100% 안심할 수 없을 것이라 이야기까지 나온다. 불상사가 우려되는 상황인 것이다.

일단 부결 시 민심의 분노는 반대표를 대거 던졌을 것으로 예상되는 새누리당을 주 타깃으로 삼을 게 분명하다. 지난주 촛불시위 때만 해도 새누리당 당사에 계란이 투척되고 지방의 시도당 사무실에 간판이 훼손되기도 했다.

그러나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당장 9일일부터 성난 민심이 여의도를 찾을 가능성이 크고 10일 촛불집회는 여의도에서 새누리당 당사를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다. 특히 반대표 쪽에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새누리당 친박계는 거의 '공공의 적' 수준으로 취급받을 수 있다.

해당 의원들의 지역구 사무실을 비롯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오프라인에서 엄청난 비난이 쏟아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일부 친박계는 이를 의식해 9일 투표 시 탄핵 찬성 기표에 대한 인종차 등을 남기는 방안을 강구중이라지만, 부결된다면 이마저도 성난 민심을 둘러세우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점현 대표 등 핵심 친박계는 내심 탄핵안 부결을 계기로 보수층이 결집하는 등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와 유사한 '탄핵 역풍'을 기대하는 것 같다. 하지만 그간 드러난 민심을 감안하면 이같은 바람은 현실성이 적다. 당장 이 대표 등 친박 핵심들이 1차 타깃이 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탄핵 부결 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도 안심할 처지는 못된다. 국민적 기대감 속에도 탄핵을 관철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촛불민심이 야당의 책임을 추궁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해 이번 사태 처음부터 탄핵과 야야 주장에 주저했다는 점에서, 국민의당은 끝부분에 와서 2일과 9일 탄핵안 처리를 놓고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탄핵 찬성파들의 비난을 산 바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표결을 하루 앞두고 탄핵안이 부결되면 전원 의원직에서 전원 사퇴하겠다는 배수진을 치는 등 선명성 강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여기에 탄핵안 부결 시 그 책임을 온전히 새누리당에게 돌리려는 의도도 들어 있다.

부결이 되면 여야 정치세력간 치열한 책임 공방도 필연적으로 벌어진다. 새누리당은 친박과 비박이 서로를 향한 사태들이 쏟아질 수 있고, 민주당은 추미애 대표 등 지도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비문재인 진영의 공세가 벌어질 수 있다. 국민의당도 그간의 지도부 행태에 대한 책임을 묻는 내부 비판이 줄을 이룰 공산이 크다.

이같은 상황을 보는 일반 여론도 정치권 전체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단순히 특정 정당의 책임을 묻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정치권 전반의 변화를 요구할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국회 해산 내지 새누리당 해체 주장이 제기될 수 있고 박 대통령의 하야와 친박파에 대한 정계은퇴 요구가 분출할 개연성이 있다. 이를 놓고 정계개편과 함께 차체에 정치권 시스템을 바꾸자는 개헌 주장도 나올 수 있다.

핵심 당사자인 청와대도 안심할 수 없는 처지다. 성난 민심이 어디로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광화문 집회는 전국 각지에서 울라온 촛불로 가장 뜨거운 시위가 될 게 분명하다. 이 과정에서 불상사가 없을 것이라 보장도 하기 힘든 상황이다.

청와대와 정치권의 운명을 가를 탄핵안 표결이 이렇게 국민과 정치권 앞으로 다가와 있다. /뉴시스

황헌 도의장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전북도의회 황헌 의장은 8일 대한 적십자사 전북지사에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황 의장은 이날 도의회를 방문한 대한 적십자사 전북지사 김광수 회장과 이근웅 사무처장,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전북협의회 임창만 회장 등에게 특별회비를 전달하고 노고를 격려했다.

황 의장은 "소외되고 고통 받는 이웃을 도와주고 불의의 재난과 재해를 당한 주민을 위해 구호활동을 펼쳐 인도주의 정신을 실천해온 적십자사와 봉사원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국정혼란과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운 시기지만 적십자회비 모금에 도민들이 적극 동참해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고 회비모금 동참을 호소했다. /인재용 기자



박근혜 즉각퇴진 8일 오후 서울 중로구 광화문 광장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국민주권시대를 여는 시국기도회' 행사장 의자에 정권 퇴진 촉구 피켓이 놓여져 있다.

김광수, '국민연금 가입 배우자·자녀 소득공제 혜택' 법안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활동중인 김광수 의원은 8일, 거주자가 배우자 및 자녀를 위하여 납입한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 가입 배우자·자녀 소득공제 혜택'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의해 연금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본인이 납입한 연금 보험료만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이에 김광수 의원은 배우자·자녀를 위해 납입한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해서도 소득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배우자·자녀의 가입을 늘리고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거주자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에 해당하는 배우자와 자녀를 위하여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금액에서 본인만 납입한 연금보험료만큼만 공제를 해주지 않았다"면서 "그 결과 현재 소득이 없는 자의 국민연금 임의가입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에 해당하는 배우자·직계비속 및 입양자를 위해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이를 통해 소득이 없는 자의 국민연금 가입을 촉진함으로써 전 국민 노후보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재용 기자

김무성 '탄핵결과 무조건 승복해야'

비박계 수장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8일 "탄핵을 추진하는 주체들, 집권을 꿈꾸는 정치 주체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적 절차를 존중하고 그 결과에 무조건 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탄핵 표결은 헌정 질서를 바로 잡기위한 헌법 절차"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탄핵은 권력 추구를 위한 전략 차원에서 접근해도 안 되고 민주정치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탄핵소추, '직무집행 위법성 여부'가 핵심 쟁점

탄핵소추안에 헌법 위반 13개 · 법률 위반 5개 담겨... '대통령 세월호 7시간' 사유 될지 주목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될 경우 박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을 위배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탄핵소추안에 담긴 탄핵사유들이 국회의 주장대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면 현재는 탄핵을 결정하게 된다.

탄핵소추안에 담긴 탄핵사유... 헌법 위반 13개에 법률 위반 5개

8일 정치권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에서는 박 대통령이 최순실(60)씨에게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고 있는 각종 정책 및 인사 문건을 전달토록 하고, 국가 정책 및 고위 인사에 관여하도록 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국민주권주의(헌법 1조) 등 13개의 헌법 위반 사유를 들었다.

또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를 설립하고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회원 기업들로부터 출연금을 받고, 출연 기업들에게 유리한 조치를 시행했다는 등의 혐의에 대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5개의 법률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에서는 "박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원리를 위반함과 동시에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에 대한 배신"이라고 적시했다. 이어 "박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적혀 있다.

탄핵사유 직무집행·법 위반 여부 핵심 쟁점 부각

먼저 탄핵소추안에 적시된 박 대통령의 행위가 직무집행에 해당되는지가 쟁점이 된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 심판 결정문에서는 "직무란 법 제삼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 및 통

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라고 적시했다.

이어 "직무집행은 법령·조례 또는 행정관행·관례에 의해 지위의 성질상 필요로 하거나 수반되는 모든 행위를 의 미한다"며 "국정수행과 관련해 행하는 모든 행위이므로 각종 단체·산업 현장 등 방문, 공식 민간, 방송 출연 및 기자회견 등도 모두 포함된다"고 밝히고 있다.

다음 쟁점으로는 박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는지 가 꼽힌다. 현재는 노 전 대통령 결정문에서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란 모든 법 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단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를 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의 직무행위가 탄핵에 해당되는지가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는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중요하게 작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검정이 박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배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까지 규명해내느냐에 따라 현재에도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7시간' 행정 의혹... 탄핵 사유 해당될까

탄핵소추안은 박 대통령이 지난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 사건과 관련해 생명권 보장(헌법 10조) 조항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이다.

당초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정 논란은 정치적 갈등으로 탄핵소추 사유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관저에서 '올림픽' 손질을 받고 있었다는 등의 언론 보도들이나 야권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지게 되면서 결국 헌법 10조(생명권 보장) 위배사항으로 탄핵소추안에 포함됐다.

탄핵소추안에서는 '박 대통령이 최고결정권자로서 세월호 참사의 경우나 피해상황, 피해규모, 구조진행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직무유기에 가깝다'고 적시했다.

법조계에서는 탄핵소추 사유로 '세월호 7시간 행정'이 포함되는 것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당시 행적이 엄격하게 법을 위배했다고 볼 구체적인 행위가 있는지, 정확한 위법행위가 무엇인지 드러나지 않아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다. 반면 당시 국가적 위급상황에서 대통령으로서의 임무수행이 부적절했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기 위해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 /뉴시스

탄핵소추안에서는 "박 대통령이 최고결정권자로서 세월호 참사의 경우나 피해상황, 피해규모, 구조진행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직무유기에 가깝다"고 적시했다.

법조계에서는 탄핵소추 사유로 '세월호 7시간 행정'이 포함되는 것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당시 행적이 엄격하게 법을 위배했다고 볼 구체적인 행위가 있는지, 정확한 위법행위가 무엇인지 드러나지 않아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다. 반면 당시 국가적 위급상황에서 대통령으로서의 임무수행이 부적절했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기 위해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 /뉴시스

9일 오후 탄핵안 표결 확정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 공식 보고됐다. 이로써 탄핵안 표결시점이 9일 오후로 확정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2시45분께 탄핵안 발의 사실을 보고한 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법사위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는 본회의에 보고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지만 이번 정기국회 회기가 내일로 종료되므로 국회법이 정한 탄핵소추안 법정처리 시한을 준수하기 위해 내일 예정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심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각 교섭단체는 내일 본회의 개의를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민약 탄핵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박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다. 정 의장은 소수의결서를 헌법재판소와 청와대에 송달해야 한다. /뉴시스

내일 '탄핵안 표결' 시 국회 경내개방 안 하기로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되는 오는 9일 국회 경내 개방을 불허키로 했다.

김영수 국회대변인은 8일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4시부터 국회 정문을 제외한 경내로의 출입문은 통제된다.

다만 국회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서의 집회는 허용된다. 정 의장과 3당 원내대표는 아울러 국회 정문 경계에는 경찰차벽을 설치하지 않고, 경계 담장 안쪽에 경력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경비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김 대변인은 "3당 원내대표는 내일 본회의 표결을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 방해 받지 않는 분위기에서 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회 경내에서의 집회와 시위는 허용될 수 없지만 법적 테두리 안에서 주권자의 평화롭고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임"이라고 부연했다.

표결이 진행되는 본회의장의 경우, 일반인 방청은 100석까지 허용된다. /뉴시스